

사상사로 본 한국 현대사

[서평] 홍정완(2021), 『한국 사회과학의 기원: 이데올로기와 근대화의 이론 체계』, 역사비평사, 413쪽.

옥 창 준*

1. 사상사 연구의 어려움

필자를 포함하여 한국 근현대 사상사를 공부하는 연구자들이 농담 반 진담 반 자주 듣는 질문으로 “과연 한국에 사상이 있는가?”가 있다. 이와 같은 난처한 질문은 특정한 가치 판단을 전제한다. 한국 근현대사에 이른바 ‘사상’이라 일컬을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상의 공백, 혹은 정전(canon)으로 모두가 인정할 만한 공신력 있는 사상적 텍스트의 부재는 한국 근현대 사상사 연구자들이 필연적으로 넘어야 할 첫 관문이다.

그런 저간의 사정 때문일까. 지금까지 한국 근현대 사상사의 작업은 근대의 경우 실학과 개화의 계보 설정 문제, 현대의 경우 자유주의나 민주주의 등 몇 가지 열쇳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근대의 경우, 조선의 자체적인 근대화 가능성을 개화사상에 찾고 그 역사적 근원과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박사과정

토대를 조선 후기 실학사상에서 발견하고자 했다면, 현대의 경우 자유민주주의의 역사적 토대를 캐물었다. 혹은 이러한 계보 속에서 사상으로 인정받는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한 심층적인 사상사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다(적어도 이런 연구를 하는 사상사 연구자들은 앞서 언급한 난처한 질문을 피해가거나 덜 들을 수 있었을 터이다).

상황이 이렇게 열악하기에, 사상사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말 그대로 사상의 역사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연구는 찾아보기란 쉽지 않았다. 사상의 현재적 함의에 중심을 두면서 맥락을 무시한 자의적인 해석을 일삼거나, 몇몇 인물을 상찬하는 기념사업회 식의 연구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렇기에 사상사 연구의 꾸준한 축적 속에서도 ‘한국에 사상이 있는가?’와 같은 근원적인 질문에는 쉽사리 답할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었고, 사상사 연구가 지닌 지적 가치와 신뢰도도 유지되지 못했다. 2017년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전후 한국의 사회과학 연구와 근대화 담론의 형성」에 기초를 둔 홍정완의 『한국 사회과학의 기원: 이데올로기와 근대화의 이론 체계』은 이와 같은 사상사 연구의 위기에 응수한 노작(勞作)이다.

2. 사상의 지형학

우선 홍정완의 연구는 당대의 사료를 섭렵한 연구자가 사상사의 방식으로 한국 현대사에 어떻게 새로운 해석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여전히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관한 연구는 한국 현대사 연구의 기본 틀인 정치사·정책사·운동사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연구자들의 관점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 사상의 경중이 매겨지고 이에 입각한 평가가 제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혹은 한국 현대사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영향력이 과장되고 과대평가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곤 했다.

기존의 정치사 중심의 한국 현대사 연구의 관점이 다변화되는 맥락에서 저자는 사상사의 관점에서 한국 현대사 읽기를 시도한다. 이 책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상사 연구는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사상적 표현’인 텍스트를 탐색하고 그 내적 논리 구성을 이해하고 재현하는 작업이면서, ② ‘텍스트’와 ‘텍스트’의 관계들, 나아가 텍스트가 놓여있는 맥락(컨텍스트)과 텍스트의 관계를 해명하고 ③ 그 속에서 텍스트의 의미—의도와 기능, 효과—를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이와 같은 사상사 방법론을 기본으로 하되, 이 책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특정한 문제와 연관된 당대의 사상적 지형을 재구성하는 가운데, 그 지형 속에서 해당 텍스트가 갖는 정치적, 사회적 의미—의도와 기능, 효과—를 재현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의미의 계열에서 또 다른 구획으로의 흐름—지속과 단절, 전환—이 갖는 의미를 나타내야 한다(17쪽).”

여기에서 핵심은 사상적 지형(地形)이다. 이 책은 개인의 사상을 심도 있게 연구하는 방식을 의도적으로 피하면서, 사상 지형의 전체상을 두텁게 묘사하고, 심지어 여기에 시간축을 도입하여 지속, 단절, 전환의 맥락을 드러냈다. 또 동시대 동아시아 및 제3세계라는 공간축까지 도입하여 한국적 맥락을 비교사적으로 파악했다. 이 같은 노고를 통해 1950~60년대 지성계의 전반적인 지형도를 입체적으로 복원하며 사상의 변동 양상이 더 역동적으로 포착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사상의 지형학을 시도했을까. 몇 가지 추정이 가능하다. 먼저, 흔히 사상의 불모지로 여겨지는 시대를 연구하면서 하나의 텍스트나 한 인물을 중심으로 서사를 짜기보다는 전체적인 사상의 지형도를 그리는 일이 일차적으로 시급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다음으로 사상의 지형학은 ‘사상의 지리학’을 넘어설 수 있는 좋은 대안이기 때문이다(‘사상의 지리학’은 사상의 지적 기원이 어느 국가나 지역인지를 따지는 연구 경향을 칭하는 평자의 조어이다).

사상과 그 사상의 기반이 되는 지식 체계는 매우 심층적인 차원에서 작동하는 영역이다. 이 시기 한국 사회과학자들로 대표되는 한국 지식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주로 그들이 교육받은 제국 일본의 언어이거나, 혹은 이제 새로운 문명표준으로 자리매김한 미국의 언어였다. 사상의 지적 기원을 지리학적 관점으로 분석하게 되면, 그 사상의 지식 체계가 얼마나 일본적인지, 혹은 얼마나 미국적인지를 따지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된다. 이 속에서 한국 지식인들의 행위성(agency)과 변화의 양상을 조명하는 연구를 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사상사 연구의 결론이 오히려 일본과 미국의 지식 체계가 지닌 구조적 힘을 재확인하는, 다소 헛헛한 결론으로 그치곤 했던 이유였다.

이와 같은 사상의 지리학이 지닌 난점을 돌파하기 위해 저자는 그와 같은 사상의 섭취와 전유가 한국의 사회적 현안과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결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실천적인 전망을 제공했는지라는 관점에서 당대의 사상적 지형도를 파악하고자 했다. 중요한 것은 지식 체계의 ‘원산지 규명’도 아니고, 지식 체계에 기초를 둔 사상이 얼마나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했는지 후대의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아니었다. 저자는 당대 한국 사회와 호흡하면서 사회과학자들이 현안에 대해 어떤 발화를 했는가를, 지형학자가 지형을 보듯이 세밀하게 관찰할 따름이다.

이런 발상의 전환을 통해, 기존에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던 한국 사회과학자들은 한국 사회가 처한 역사적, 세계적 현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천적 전망에 관한 이념적, 지적 프레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부각될 수 있었다. 『사상계』에서 활동했던 지식인들에게만 ‘사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과 학계에서 산출된 여러 교과서와 저서에 한국 사회의 현실을 고민한 한국 사회과학자들의 사상이 존재했다. 이들은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식 체계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 사회의 문제를 해석하려고 분투했다. 해방과 분단, 전쟁, 냉전, 혁

명과 독재 속에서 그 사상의 맥락이 일관되게 보존되고 계승되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책 제목인 『한국 사회과학의 기원』은 마치 한국 사회과학의 역사적 기원(origin)을 추적할 것 같은 인상을 주지만, 평자가 생각하기에 이 책에서 저자가 시도한 바는 당대 한국 사회과학이 놓여있는 역사적 ‘토대’(foundation)를 이데올로기적 지형을 중심으로 살피고, 이 지형이 어떤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근대화의 이론 체계를 내재적으로 창출, 궁극적으로는 미국발 근대화론과 접촉해나갔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이 책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시기를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1945년 해방 후부터 한국전쟁 발발 이전의 시기다. 이 시기에는 제국 일본 지식 체계가 냉전기 미국 지식 체계로 재편되었다. 이와 같은 지적 체계의 변동 속에서 한국 사회과학자들은 민주주의(정치학)와 자본주의(경제학)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이 둘은 해방 이후 신질서에서 중요한 가치였으나, 식민지 조선인에게는 생소한 개념이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한국전쟁 발발부터 4·19 이전까지의 시기이다. 한국전쟁 이후 반공주의가 강화되는 와중에 한국 사회과학자들은 한국 사회의 후진성 극복 방향을 고민했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후진성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4·19와 5·16이라는 정치적 격변을 거치며 근대화와 관련된 담론이 확산하는 마지막 시기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남았다.

3. 일본의 그림자와 후진성

방대한 사료 검토를 통해 이 책이 새롭게 조명한 것은 제국 일본 지식 체계가 해방 이후에도 줄곧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실제의 전개 양

상을 알고 있는 이는 매우 적었다. 제국 일본 지식 체계의 잔존은 탈식민 한국에서 ‘식민’의 기억을 상기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는 쉬쉬되었으며, 당대를 살았던 학자들의 회고담을 통해서도 잘 복원되지 않았다.

전체 사상의 지형을 아우르는 이 책의 분석을 통해 일본식 지식의 영향력은 매우 상세하게 규명된다. 한국전쟁 이전 한국 정치학자들은 독일식 국가학·국법학으로부터 정치학의 독립을 추구했던 근대 일본 정치학계의 체계를 따르면서 정치학을 정립시키고자 노력했다. 대부분의 원문서와 교과서들은 일본 정치학계의 서술형식을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이처럼 해방 이후에도 한국 정치학의 형식과 내용은 여전히 일본식 지식 체계의 짙은 영향 아래 있었다.

그렇다면 일본식 지식 체계는 왜 이리 활용되었을까? 한국전쟁 직전에 발간된 서필원과 백상건의 정치학 작업은 일본의 이마나카 쓰기마로(今中次磨)의 정치학 체계에 크게 기대어 있었다(심지어 서필원과 백상건은 이 출처를 따로 밝히고 있지도 않았다!). 저자는 이들의 지적 표절을 비난하거나, 이와 같은 계보를 발굴한 자신의 노고를 과장하지 않는다. 대신에 왜 하필 이마나카 쓰기마로의 논의를 이들이 활용했느냐는 사상사적 물음에 해석을 차분히 제시한다. 이마나카 쓰기마로의 정치학 체계는 공공성에 근거한 균등사회의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이는 미국식 민주주의의 정치적 자유의 이념과 소련식 민주주의의 경제적 균등의 이념을 비판적으로 섭취하려는 당대 한국 사회의 지식계의 태도와 친화성을 보일 수 있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일본식 정치학 체계의 활용보다 이와 같은 논의가 필요한 한국적 맥락이다.

한국전쟁 이후에도 한국 정치학계는 민주주의를 단순히 정치적 제도라기보다는 경제적 균등의 관점에서 해석했다. 이는 당대 한국 사상계에서 널리 번역되어 유통된 해롤드 라스키(Harold Laski)의 인기 비결이기도 했다. 일본식 지식 체계의 활용이든, 해롤드 라스키의 번역

을 통해서든 한국 정치학자들은 정치적 다원주의를 전제로, 의회민주주의에 근거한 국가권력의 경제적 개입을 통해 경제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중시했다.

한국전쟁 이후 민주주의론에서도 일본 정치학계의 유산이 확인된다. 사회민주주의 내지 민주사회적 경향이 주류를 구성하는 가운데, 국민적 동질성의 회복을 위해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를 강조하는 신도성의 민주주의론이 그 사례이다. 그는 사유재산의 절대 불가침성을 강조하지 않았고, 평화적 의회주의와 민주주의의 입장에서 사회생활의 연대성과 협동성을 대안으로 삼았다.

이와 같이 연대와 협동을 강조하는 민주주의론의 기본틀은 야베 데 이지(矢部貞治)의 공동체적 중민정론에 의거했다. 신도성이 야베 데 이지의 논의를 통해 주목한 것은 경제적 균등을 통해 한국 국민의 공동체성과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처럼 온건한 사회민주주의적 처방을 통한 균등성과 동질성의 회복은 1950년대 중반까지 한국 정치학자들의 규범적 목표였고, 이를 위해 한국 정치학자들은 일본식 정치학 체계를 적극 활용했다.

1950년대 후반부터 과학으로서의 정치학을 주장했던 찰스 메리엄(Charles Merriam)과 해럴드 라스웰(Harold Lasswell)의 저작이 번역되기 시작했다. 훗날 행태주의(behavioralism)로 불리는 새로운 미국식 학풍의 소개였다. 미국의 기술원조 사업인 미네소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행태주의의 전도사를 자임했다. 이들은 기존의 (일본식) 정치학 체계를 정치제도와 기구에 관한 제도·법적인 고찰로 보고, 현대 정치학의 과제는 동태적인 정치행태 혹은 행위 현상으로서 정치현상을 과학적으로 해명하는 것이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에서 산출된 행태주의 연구들이 영미 정치학 연구 경향뿐 아니라 이를 통해 산출된 일본 정치학계(로야마 마사미치[蠟山政道], 하라다 고[原田鋼] 등)의 성과를 대폭 참고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행태주의 혁명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었으나, 그 변동은 동시대 일본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한국 지식인들은 미국과 일본 지식 네트워크 사이에서 그 변동을 이해했다. 미국발 행태주의에서 주변화된 문제군에 대해서는 일본 정치학계의 연구를 참조하여 자체적인 보충 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미국발 행태주의 정치학을 한국 정치학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인물은 윤천주였다. 윤천주는 기존의 지배적인 정치학의 학문 경향을 독일에서 발원하여 일본뿐 아니라 미국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친 법·제도 중심의 정치학 접근법이라 규정하고, 이러한 경향이 정치 행태를 고려하지 않는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인 접근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행태주의자들은 과연 기존의 비현실적 정치학과는 다른 ‘현실적’인 처방을 제시했을까.

윤천주는 한국이 저개발국가로서 불균형성과 불안정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저개발국가는 투입-산출의 균형이 유지하기 어렵기에, 정치화 내지 정치교육을 통해 점진적으로 불균형과 불안정을 제거하여 정치체제에 대한 지지를 증가시켜 나아가야 했다. 윤천주는 한국의 상황이 도시화의 진전과 교육의 기준으로 본다면 비서방국가보다 월등하지만, 부와 산업화의 지표는 너무나 낮기에 양자의 불균형으로 정치의 불안정성이 조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천주는 산업화를 위한 경제개발 계획의 실천이 빈곤의 악순환을 타파하는 것뿐 아니라 정치적 민주주의 실현에도 제일 의의가 있다고 파악했다. 행태주의자가 한국이라는 저개발국가의 맥락에서는 ‘근대화론자’가 되어가는 지적 궤적에 대한 분석이다.

하지만 행태주의가 활발히 수용되는 와중에 일부 정치학자들은 행태주의적 접근법이 후진국의 사회과학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다. 동질적이고 평균화되고 수평화된 선진사회에서는 행태주의가 유용하지만, 이질적인 대립과 모순을 내포한 후진사회에서 사회과학은 현실 문

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념의 탐구를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행태주의의 옹호자와 반대자 모두 한국 사회의 불안정성과 후진성에는 동의했다. 이처럼 후진성은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던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 한국의 정치학자들이 주목한 시대의 ‘통주저음’이었다.

4. 근대화론의 선학습

행태주의가 본격적으로 수용되었지만, 행태주의 방법론을 통해 한국 정치를 세련되게 분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미국식 정치경험에 근거한 행태주의 방법론과 한국의 정치적 현실은 그다지 맞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정치학자들의 논의는 상아탑의 세계에 머무르고 있었다. 반면 한국 경제학자들은 한국 사회의 후진성을 더 강하게 의식했다. 오히려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후진성은 더욱 절실히 다가왔을 터이다.

한국전쟁 발발 이전 한국의 경제학계에서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영향력이 일정하게 지속하고 있었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논리를 따르자면 아직 한국에 도래하지 않은 자본주의 단계는 언젠가 지양(止揚)될 운명을 지닌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정부 수립을 전후한 시기부터 마르크스주의와 이질적인 학문적 경향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신고전파 경제학에 근거한 경제학 교과서 및 원론서가 출간되고 케인즈 경제학을 비롯한 비마르크스주의 경제학에 근거한 학자들의 움직임이 활성화되었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경제학계의 이데올로기적 재편은 본격화되었다. 마르크스주의적 문제의식은 소실되었고 한국 경제의 후진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전(前) 자본주의 단계로 파악되

었다. 미국적 해석이 가미된 케인즈 경제학이 일본 학계의 번역을 통해서 수입되어 활발하게 소개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과연 케인즈 경제학이 한국의 빈곤한 현실에 타당할까라는 의문도 표명되었다. “선진 제국에서 케인즈를 말한다고 하여 우리 후진국에서도 그의 이론이 크게 적용되는 것 같이 보아서는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197쪽).

한국의 후진성과 더불어, 한국과 달리 근대화를 이룩한 서양의 근대화 과정이 강하게 의식되었다. 즉, 후진성의 인식이 근대화에 대한 갈망으로 연결되었다. 구미 제국(諸國)의 역사 과정에 있어서 경제 체제의 근대화가 개시된 것을 ‘부럽게’ 돌아보면서 그 속에서 한국 경제 재건의 실제적 기초를 찾아내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했다. 현재 한국이 처해있는 후진성의 위기는 구미와 150~200년의 시간적 격차가 나고 있으며, 선진성을 쟁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낙후적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 법률, 정책 전반의 통일적인 강력한 조치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도 존재했다.

경제 영역만을 분석하기에는 너무나 비관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제 이외의 영역을 함께 분석하는 후진국 개발론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 관한 일본 학계(특히 이타가키 요이치[板垣與一])의 연구를 수용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타가키 요이치는 국제적인 불평등성의 완화·제거와 후진국 내부의 주체적 조건, 즉 사회 내부의 이질성 극복과 전근대적 사회 구조 및 생활 태도의 변혁을 주장했다. 특히 이타가키 요이치는 동남아시아 민족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산주의와 결합하는 혁명적 형태보다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의 적극적인 경제 원조, 무역 관계의 재조정 등과 결합하여 경제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한국 지식인들의 구미에 맞는 처방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타가키 요이치의 연구는 미국발 근대화론 이전의 근대화론이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한국 지식인들이 이미 미국발 근대화론의 수용 이전에 이미 근대화론의 언어를 자발적으로 선학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50년대 말로 접어들면 자본주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던 관점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근대 산업자본주의를 목표로 삼으며 전근대와 근대, 선진과 후진의 구도가 가시화되었다.

5. 제3세계와 한국

이와 같은 설명과 해석을 따라다가 보면, 이 시대를 바라보는 새로운 풍경이 그려진다. 우선 지식인들은 반공주의만으로 환원되지 않는 지적 자율성을 보였다. 한국 지식계는 새로운 지식 체계를 수입하면서도 과연 이와 같은 지식 체계가 한국에 적합한지를 자문할 수 있을 정도의 기초 체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들이 서서히 선진-후진이라는 틀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한국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다른 국가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는 세계사적 구도에 포섭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1948년 남북분단의 공식화 이후, 아시아를 논할 수 있는 한국 사회 내의 이데올로기적 폭은 좁아지고 있었으나, 한국 역시 ‘탈식민’ 국가였기 때문에 단순히 이는 반공주의만으로 환원되지는 않았다. 우파는 냉전적 담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었지만, 중도파 성향의 지식인 층에는 여전히 분단으로 희생된 ‘민족’이라는 관점이 확산해 있었다.

이와 같은 사상적 지형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변모한다. 기존의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한 『사상계』 역시도 이러한 진영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한국 지식인들은 인도와 동남아시아를 축으로 한 중립, 제3세력의 형성을 비판하고 이를 향해 깊은 경계심을 품었다. 반동회의에 대한 해석 역시 진영론의 관점을 취했다. 당시 진영론의 기저에는

미국과 소련을 축으로 한 권력정치로부터 벗어날 길은 없다는 비관적 태도가 자리 잡고 있었다.

변화는 수에즈 운하 국유화를 둘러싼 이집트 나세르의 행보로부터 왔다. 영국과 프랑스를 상대로 민족주의적 요구를 했던 나세르의 책은 한국 사회에 2권이나 경쟁적으로 번역·소개될 정도였다. 나세르를 통해 한국사회의 대내외적 현실에 견주는 논의가 등장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한스 모겐소(Hans Morgenthau)의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이 수용될 수 있었다. 당대의 맥락에서 현실주의는 현실을 추수하는 이론이라기보다는 현실을 비판하는 비판이론의 속성을 보였다. 즉 권력정치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구조적 이론이 아니라, 권력을 많이 가진 국가가 만들어낸 이데올로기를 일종의 ‘허위 의식’으로 보자는 제안으로 독해되었다.

1950년대 한국 지식인층은 제3세계와 한국을 동일시하는 가운데 ‘후진성’ 담론을 구사했다. 후진성과 정체성(停滯性)은 서구와 대비되는 아시아, 동양의 역사적 ‘정체성’(正體性)이었다. 서구가 선진으로 표상되자 자연스럽게 동양은 후진으로 그려졌다. 즉, 이는 서구적 근대성이 보편화되는 동전의 양면이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195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한국 지식인들이 제3세계 군부 세력의 집권이나 독재 및 권위주의를 우호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류의 의견은 후진성 극복은 민주적이면서 활력 있고, 능률적인 정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4·19 혁명 이후 민족주의적 분위기가 강화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위상이 상대화되기 시작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의 주장처럼 자유민주주의가 미국의 대외적 지배 이데올로기의 결과라는 주장도 등장했다.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선진 국가를 향한 아부이며, 국가계획에 의한 중공업의 건설과 국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적 선거제도에 의한 정치체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는 후진성의 탈피

를 위한 산업화와 발전체제의 수립을 주장하는 목소리로 이어졌다.

5·16 쿠데타를 주도했던 이들은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과 공명했던 흐름을 탄압하면서 발전체제의 수립을 주장했던 목소리를 포섭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들은 쿠데타를 근대화를 향한 민족주의적 혁명으로 표상했다. 소위 ‘혁명과제’의 설정과 제시에 적극적으로 결합한 지식인층에는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 분야의 학자들이 많았다. 쿠데타 이후에 한국 지식인들은 정치적 혼란과 빈곤의 악순환 등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독재적인 수단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군부 정권에 참여한 지식인들은 이제 정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후진사회를 구조 변혁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기구를 물신화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 구도의 재편 속에서 『사상계』 지식인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했다.

6. 사상사 연구의 의미

홍정완의 저작은 연구자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파편적으로 전개되어 오던 사상사 연구에 대응하여 사상의 지형도를 그리는 방식으로 응수했다. 저자의 노고로 완성된 지형도는 앞으로 이 시대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 지형도를 통해 전체 사상의 지형을 구성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새롭게 사상의 지도를 그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 사회과학의 역사에 관심 있는 이들이나 한국 현대사의 사상적 측면과 분위기를 알고자 하는 여러 후학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저작이다.

그러나 이 지형도는 읽어내기에 상당한 난이도가 있다. 이 서평을 통해 이 지형도를 읽어내는 하나의 독법을 제시했기를 바랄 뿐이다. 이 책의 미덕을 하나 더 지적하면서 서평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 책

은 사상사 연구자가 빠지기 쉬운 오류에 빠지지 않았다. 사상사 연구자는 자신이 연구하는 시대와 사상가의 목소리에 감화(?)되어, 그 사상의 현재적 의의를 상찬하는 식으로 ‘오바’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책에서는 정말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 저자는 어느 한 쪽의 목소리에 감화되지 않는 높은 무공을 발휘했다. 당대의 현실과 호흡하며 완성된 사상이라는 작품의 악보를, 저자는 그 작품의 구조와 형식,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서 묵묵하게 연주하면서 그 의미를 재현해냈다. 가장 좋은 사상사 연주자는 창조하는 자가 아니라 ‘추창조’(追創造)하는 자라는 말에 걸맞게 말이다.